

## 디지털 융합시대 방송통신 정책방향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

### 요약

지난 20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디지털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09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기 분야도 예년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고용효과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방송통신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IPTV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네트워크 및 콘텐츠 투자 확대, 공공분야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집중 추진하고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고 한다.

나아가 수평적 규제체제로 나아가는 통합 사업법 준비에 본격 착수하고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적합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규제 개혁이, 통신분야에서는 본원적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가 핵심이다. 아울러 소중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 발달과 산업 성장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는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에 유리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시대에도 방송통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1. 여는 글 : 디지털 융합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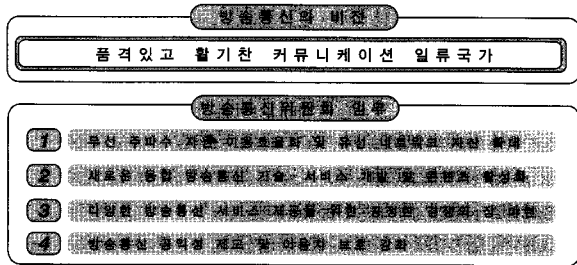
방송통신 융합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케이블(흔히 유선) 방송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통신)사업을 하고 있고 KT 같은 통신사업자는 IPTV 방송을 내보내는 현실, IPTV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방송, 인터넷전화의 트리플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 휴대전화기로 DMB 방송을 시청하는 모습 등등.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며 무엇이 방송이고 무엇이 통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분야에서는 종종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는데, 우리의 경우도 지난 몇년간 방송통신 관련 기관의 이원화(방송 : 방송위원회, 통신 : 정보통신부)로 소비자들이 앞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다행히 지난 20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통합 정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이러한 디지털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1) 무선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화와 유선 네트워크자산의 확대 (2) 새로운 융합 방송통신 기술/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의 활성화 (3) 다양

한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그리고 (4) 방송통신 공익성 제고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4대 임무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낸다면 기업측면에서는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부의 증대가, 그리고 국민과 소비자측면에서는 다양한 고품질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생활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 II. 2009년 시장 전망 및 방송통신 정책방향

### 1. 시장 전망

2009년 국내 경제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고용 불안 등에 따른 소비 부진)이 맞물리며 2008년에 비해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다.

방송통신 산업의 경우도 전통적으로 서비스는 내수, 제조는 수출 경기와 연계되는 경향에 있어 예년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된다.

우선 서비스 분야에서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의 결합상품 판매 매출 및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나, 3G 가입자 및 ARPU 정체로 이동전화시장의 성장률 저하,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시장 위축으로 방송서비스 부문의 정체가 예상된다.

기기에서도 이동전화단말기 및 패널은 경기침체 및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한자리수 성장에 머물 전망이며 반도체도 세계적인 공급과잉은 해소되나 수요침체로 가격회복이 더

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2. 방송통신 정책방향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고용효과가 높고 가치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IPTV 같은 신규 서비스와 방송통신 콘텐츠를 양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기기, 콘텐츠, 네트워크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파급효과가 가능해질 것이다.

## III. 분야별 정책방향

###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조기 활성화

그간 서비스 성격 논란(방송 vs 통신) 논란으로 도입이 지연되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시되는 IPTV는 TV로 인터넷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융합서비스다. 혹자는 “모든 것이 다 되는 TV”라고도 표현한다.

2007. 12월 법 제정에 이어 2008. 9월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의 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마침내 2008. 11월 “Pre(시범)”라는 꼬리표를 떼고 실시간 지상파 전송을 포함해 VOD 시청, 인터넷뱅킹, 웹서핑, 홈쇼핑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상용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내년부터는 IPTV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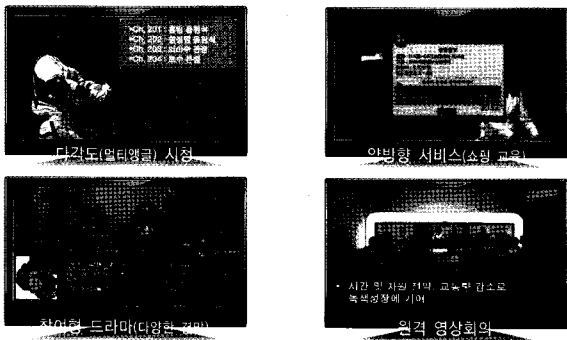
<표 1> IPTV 활성화 주요계획

분 야	예 산
IPTV 공공분야 시범사업 및 테스트베드 구축	'09년 42.5억원
IPTV용 콘텐츠 진흥 (매체융합형 콘텐츠, 영어자막 서비스 등)	'09년 80억원
IPTV 현안기술 개발 (호환가능한 개방형 단말, 품질관리 등)	'09~'10년간 90.3억원
IPTV 전략기술 개발 (압축전송, 보안, 홈미디어, 이동 네트워킹 등)	'09~'12년간 635억원
기술개발 및 표준화 기반	'09~'12년간 223억원
IPTV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09~'11년간 450억원

이를 위해 사업 허가때 받은 계획대로 제공사업자의 네트워크 및 콘텐츠 투자를 점검하는 한편 공공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표준화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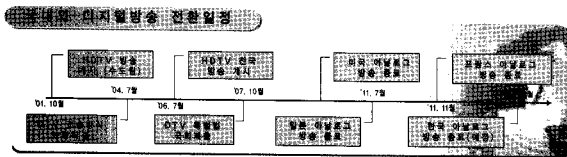
특히 IPTV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고 서비스 활성화에 필수적인 현안기술과 차세대 IPTV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기술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려고 한다.

<IPTV 서비스의 유형>



2. 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

2013년부터는 모든 방송이 디지털로 송출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2008. 3월 제정되었고 현재 범국가적 추진기구 운영과 민관 공동홍보를 실시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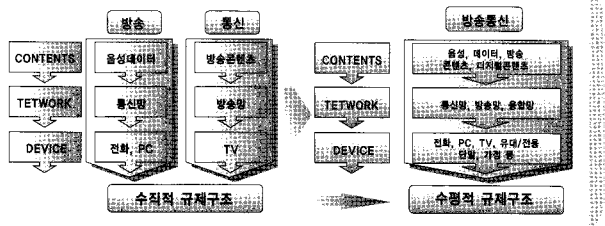
특히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2007년말 기준으로 영국은 89%, 일본은 93.9%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는 31.3%에 불과하여 2009년에는 인지도 제고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자금력이 취약한 군소방송사 및 채널사용사업자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지원('09년 197억원)하고 절대 난시청 지역에 대한 HD급 고화질 위성방송 수신설비 보급('09년 19억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3. 방송통신 통합법체계 마련

조직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지만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율체계는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2008년에는 방송통신의 개념, 일반적 원칙, 정책수단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2009년부터는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수직적) 구조 때문에 유사 서비스에 대해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를 지양하고 규제체계간 동질성을 기하기 위한 통합 사업법 마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2010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통합 사업법까지 완비되면 명실 공히 『네트워크, 콘텐츠 등의 동일 계층별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4. 방송통신콘텐츠 활성화

매체의 증가는 불거리인 콘텐츠의 적기 공급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콘텐츠를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양대 축으로 하는 방송통신콘텐츠 활성화 종합계획을 2008년말에 확정한 바 있다('08. 하반기부터 '10년까지 로드맵 제시).

그간 과도한 규제에 콘텐츠 시장에 자금 유입이 제한되며 성장이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진입, 외주, 광고, 편성 등의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이렇게 막힌 부분을 뚫고 투자자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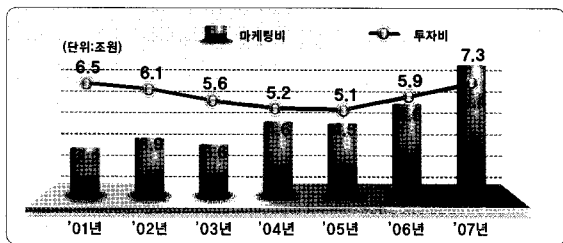
이른바 『규제 개혁을 통한 진흥』의 방식이다. 이와 아울러 공공·공익적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09년 190억원), 전문인력 양성 강화('09년 10억원), 온라인 유통시스템 등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shared service"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5. 방송서비스시장 선진화

방송분야에서는 공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키며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있어서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더욱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규제 개혁과 방송시장 선진화도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 6. 통신서비스시장 투자활성화

국내 통신시장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며 사업자들간 본원적 설비투자보다 “끼워팔기” 등을 포함해 상대편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마케팅비용이 과다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설비투자비는 6.4조원인 반면 마케팅비는 7.3조원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재원을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유도해 나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무선휴대인터넷(WiBro) 및 인터넷전화(VOIP)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업자간 품질 및 설비투자 경쟁을 촉발시키려고 한다.

### 7. 주파수자원 이용효율화

토지가 그 나라의 국민에게 귀속되듯 주파수자원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다. 이러한 소중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유도하기 위해 1GHz 이하 우량주파수\*의 회수·재배치를 추진중이다.

\* 1GHz 이하 주파수는 직진성은 떨어지나 멀리까지 도달하는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기지국을 덜 세우더라도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등 비용절약 효과 존재  
우선 방송에 부여되어 있던 700MHz 대역에서는 아날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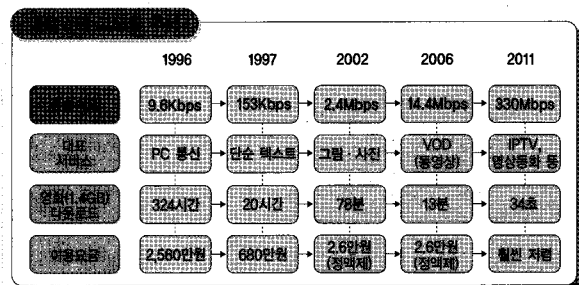
방송 종료를 계기로 일부 회수하고 800MHz 대역에서도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에 따라 일부를 회수할 계획이다. 900MHz 대역에서는 공공기관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타 대역으로 이전하고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신규로 확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확보된 주파수들은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3G 이상 용도로 할당을 추진함으로써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한다.

<b>700MHz 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를 계기로 아날로그 TV 방송용 주파수를 회수하고 'DTV 채널배치 종합계획' 수립</li> </ul>
<b>800MHz 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발 사업자가 독점하던 것을 3G로의 전환과 기존 가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일부 주파수 회수</li> <li>* 동 대역은 '11.6월로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li> </ul>
<b>900MHz 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타 대역으로 이전하여 이동통신용 주파수 신규 확보</li> </ul>

### 8. 방송통신망 고도화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속도나 비용의 저렴성 등을 막론하고 세계 최고수준이다. 해외여행을 하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외국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르면서 가격까지 싼 곳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융합의 진전에 따라 용량이 큰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원활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수준이 계속적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현재 평균인 1.5~2Mbps 속도의 50배 이상에 해당하는 100Mbps급의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려고 하고('09년 79억원) 이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도 시범도입하려고 한다('09년 37억원). 이렇게 되면 2006년



1.4GB 영화 한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13분 정도가 걸렸다면 2011년에는 34초만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된다.

### 9. 이용자 복지 증진

기술 발달의 궁극적 목적인 이용자 복지 증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보보호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안서버 보급, 악성코드 제거 등을 통해 기술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민에게 보편화된 방송통신을 이용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범죄·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의 건전성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09년 정보보호 예산: 400억원).

아울러 소외계층 및 시청자의 방송접근 개선(자막방송 등), 시청자 피해구제 등의 이용자 권익구제와 불공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09년 229억원).

## IV. 맺는 말

지난 20여년간 민관이 공동으로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가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는 IT분야에서 탄탄한 펀더멘틀을 갖추게 되었다. 2008년 OECD 국가간 초고속인터넷 평가에서 종합 1위(보급률 1위, 속도 2위, 요

금 저렴도 4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IT 지문을 담당하는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이 세계 IT시장을 다시 주도하기 위해 한국의 정보화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까지 했다. 혹자는 또 비빔밥 문화론을 들어가며 우리가 디지털 융합에도 매우 유리한 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 무형의 이점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다가오는 10년에도 우리는 방송통신 세계 일류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 신기술에 민감하고 스스로 디지털 조류를 만들어가는 소비자와 국민, 그리고 방송통신 강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부 -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다.

### 약 력



서 병 조

- 1977년 배재고등학교 졸업
- 1982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행정학사)
- 1985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행정학석사)
- 1994년 파리제5대학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국제개발법 DEA)
- 1982년 신규임용(행시 25회)
- 1986년 ~ 1994년 경제기획원 법무관실, 예산실, 경제기획국
- 1994년 ~ 1996년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 1996년 ~ 2002년 정보통신부 정보전산담당관, 통신위성과장, 정보화제도과장, 정보화기반과장, 정보화지원과장

- 2000년 ~ 2003년 주 OECD 정보통신주재관
- 2003년 ~ 2005년 정보통신부 기획예산담당관, 혁신기획관
- 2005년 공보관, 홍보관리관
- 2005년 ~ 2006년 정보통신전략기획관
- 2006년 ~ 2008년 정보보호기획단장
- 2008년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

